종교문화학보 제16권 제2호 65-94쪽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2019. 12.

기독교 통일담론의 한국 통일담론에의 기여 방안**

- 기독교 통일담론은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는가? -

안 교 성*

목 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및 이론적 배경
Ⅲ. 통일 준비를 위한 기독교의 역할
Ⅳ. 결론

국문초록

한국기독교는 통일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선도했으며, 기여도 했다. 그러나 기독교 중심의 기독교 통일담론과 모든 통일담론을 포함한 한국 통일담론은 서로 평행선을 긋는 양상으로, 상호 이해나 상호 교류가 빈약한 편이고,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양자 간의 보다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한 형편이다. 따라서 본고는 한국 통일담론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정부 통일정책을 통해 한국 통일담론을 간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과 기독교 통일담론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한국 통일담론은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을 정리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본고는 기독교 통일담론이 한국 통일담론에 어떤 기여를 했고,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집중적으로 답하고자 한다.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은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민족(자주, 민족적 대단결), 평화, 인도주의와 민간 참여(민주, 민중), 번영(이익과 번영) 등으로 나뉜다.

기독교 통일담론은 다양한 통일신학을 제시하고 통일운동을 벌린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과 관련하여 민족 동일성 회복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통일문제의 세계성을 부각했고, 주체사상 연구를 촉발했다. 둘째, 평화와 관련하여 평화와 화해의 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평화통일담론을 정착시켰고, 새로운 평화운동과 평화학을 도입했다. 셋째, 인도주의 및 민간 참여와 관련하여 민간 참여 담론을 구체화하였는데, 민간 참

*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수, 교회사/역사신학.
** 이 연구는 2019년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여가 시민 개념을 넘어서 민주, 민중 개념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고, 문화적 접근 담론 특히 사람 중심의 통일담론을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체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구동독교회 연구를 통해 민족 동질성의 일환인 교회 동질성을 탐구했으며, 통일 교육 및 훈련을 확산했으며, 기독교 현실주의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담론개발에 힘썼다. 넷째, 번영과 관련하여 미래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하여 희년신학과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신학을 발전시켰다.

주제어 : 통일, 통일담론, 기독교, 민족주의, 평화, 민간/인도주의, 번영

Ⅰ. 서론

통일은 한반도의 가장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통일의 방법, 정책 등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지만,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상이한 분위기가 고개를 들고 있고, 아직 이런 관점들이 다수 입장을 이루지는 않으나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 본고는 한반도 가운데 한국(남한)의 경우를 주로 다룰 것인데,[1] 분단 이후 이미 70여 년 즉 거의 2세대 반에 이르는 역사가 흐르면서, 한반도의 통일판도가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다. 즉 통일성취에 대한 기대보다 분단현실에 대한 익숙함이 더 커지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통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변하며, 사회구성 자체가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행중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존의 '단일민족 중심적이고 당위성을 전제한 통일담론'은 다각도로 도전받고 있다. 한마디로 통일은 물론이고 통일담론마저 위기이다. 따라서 통일담론 자체에 대한 연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본고는 한국 통일담론에 있어서, 기독교(개신교) 통일담론의 기여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2] 한국기독교는 한반도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통일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다시 말해, 한국기독교는 통일

1) 통일담론은 현재 한반도의 분단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을 가리키는 용어 사용 자체부터 민감한 문제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대한민국은 한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으로 지칭한다. 남북한을 대비시킬 때는 대한민국은 남한이라고도 지칭하고, 남북한 모두를 가리킬 때는 한반도라고 지칭한다.

2) 본고에서 기독교는 개신교를 의미한다. 한편 개신교, 가톨릭교회, 정교회 등을 모두 지칭할 때는 그리스도교라고 지칭한다. 기독교 통일담론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서울: 나눔사, 2019).

운동은 물론이고 통일담론에 일정한 몫을 담당했다.(본 세미나에서 다른 발제자가 전자에 대해 별도의 발제를 할 예정이라, 본고는 후자에 집중하고자 한다.) 그런데 기독교 통일담론이 이런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통일담론에 있어서 기독교 통일담론과 여타 통일담론 간에 원활한 상호소통과 교류가 부족하여 거의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형편이다.[3] 이런 사정은 통일연구자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따라서 한국 통일담론의 발전을 위해서 양자를 비교하는 연구는 필요한데, 이런 비교연구는 양자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비교연구를 위해서는 양자가 공동주도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이것은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는 범위를 좁혀, 한국기독교가 통일담론에 어떻게 기여했고 기여할 수 있는지를 간추려보고자 한다.

본고는 기독교 통일담론에 집중하지만, 그 좌표를 잡기 위해서는 한국 통일담론의 전체적인 윤곽이 필요한데, 이것 역시 방대한 작업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편의상 한국 통일담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온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한반도의 특수사정에 따라, 모든 통일담론은 남북한 공히 정부 통일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따라서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은 모든 통일담론의 핵심을 이룬다. 즉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을 통해, 통일담론의 기본방향과 주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고는 한국 통일담론 자체 대신 정부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을 다룰 것이다. 각설하고, 한국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성명, 합의서 및 선언을 발표했고, 이 가운데 통일정책의 기본개념을 제시해왔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고 중요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

첫째, '7.4공동성명'(이하 7.4공동성명, 1972)의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가 있다. 이외에 신뢰와 교류가 포함된다. 둘째,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 1991)의 '이익과 번영', '특수관계'가 있다. 이외에 화해, 불가침, 협력(특히 경제 협력, 균형 발전, 문화 협력, 인도적 협력 등)이 포함된다.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비핵화선언, 1992)의

3) 형식논리학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 통일담론의 하위 개념을 기독교 통일담론과 여타 통일담론으로 구분하는 것은 '범주의 오류'를 범하는 일이다. 그러나 본고가 기독교 통일담론를 중심으로 다루고, 기존의 한국 통일담론에서 기독교 통일담론이 차지하는 위치가 높다는 점에서, 편의상 이런 구분을 채택한다. 물론 기독교 통일담론의 상위 개념으로 종교 통일담론을 설정하여,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의 통일담론에 대한 개별연구 및 비교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4) 통일부,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19), 164-184.

‘비핵화’가 있다. 넷째, ‘6.15남북공동선언’(이하 6.15선언, 2000)의 ‘공통성’이 있다. 다섯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하 10.4선언, 2007)의 기존 성명 및 선언의 ‘재확인’이 있다. 이외에 통일 지향적 발전,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평화수역, 9.19공동성명, 2.13합의, 역사, 문화, 민족내부, 해외 동포 등이 포함된다. 여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선언, 2018)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촉구가 있다. 일곱째, ‘9월 평양공동선언’(이하 9월선언, 2018)는 통일의 정책적 실현 노력, 군사분야 합의서, 상호 호혜와 공리공영, 환경협력, 남북 화해와 단합의 내외 과시, 3.1운동 100주년 행사 등 공동주최, 비핵화 협력 등이 있다.[5] 여기서 다룬 문건들은 남북한 양측이 합의한 것을 대상으로 했다.[6] 따라서 위에서 간추린 기본개념은 남북한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고 성실한 준수가 요청되는 사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고에서는 주로 남한의 상황을 다룰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크게 몇 가지 줄기로 나눠볼 수 있다. 민족(자주, 민족적 대단결), 평화, 인도주의 및 민간 참여(민주, 민중), 번영(이익과 번영) 등 4가지 주제이다. 본고는 이런 구분에 따라, 기독교 통일담론의 기여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민족(자주, 민족적 대단결)과 기독교 통일담론

1. 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한국의 첫 번째 공식 통일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7.4공동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의 세 가지 주제를 제시했다. 세 가지 주제는 각각 자주는 통일의 주체에 대해서, 평화는 통일의 방법에 대해서, 민족적 대단결은 통일의 방향 및 목적에 대해서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자주와 민족적 대단결은 민족이라는 상위 개념에 수렴시킬 수 있다. 민족적 대단결은 번영에도 수렴되는데, 후술하도록 하겠다. 흥미롭게도 7.4공동성명의 역사적 배경으로는 ‘냉전 해빙기’(데탕

5)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분야합의서, 2018)는 9월선언과 더불어 발표되었는데, 적대행위(무력, 군사연습), 평화지대, 평화수역,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조치 등이 거론되었다.

6) 참고로 해당문건들의 서명인들은 다음과 같다. 7.4공동성명-이후락/김영주, 남북합의서-정원식/연형묵, 비핵화선언-정원식/연형묵, 6.15선언-김대중/김정일, 10.4선언-노무현/김정일, 판문점선언-문재인/김정은, 9월선언-문재인/김정은, 군사분야합의서-송영무/노광철.

트[detente])라는 국제정세 이외에, 외세 영향에서 벗어난 정치 자립을 추진하려는 시도가 남북한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추진된 국내정세도 있었다. 비록 이런 정치적 민족주의 성향을 띤 시도가 남북한 공히 독재체제 공고화의 빌미로 사용되고 말았지만 말이다.[7] 일단 7.4공동성명과 정치의 관계는 논외로 하고, 한국 통일정책의 첫 번째 줄기가 민족이라는 점에서 통일과 민족주의 관계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성명과 선언에 나타난 통일정책을 보면, 이런 관계가 계속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첫째, 7.4공동성명은 자주와 민족적 대단결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 자주가 남북한 모두의 대외관계에 대한 표명이라면, 민족적 대단결은 남북한 간의 대내관계에 대한 표명이다. 이 단계는 아직 주된 관심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이 공히 통일 문제의 '우선적인 당사자'요 '공동 당사자'라는 점을 천명한 셈이다.

둘째, 남북합의서는 남북한 관계가 특수관계임을 밝혔다. 7.4공동성명이 남북한 관계를 언급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반면, 남북합의서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시작했다. 즉 남북한 관계가 단순히 통일 당사자라는 객관적 관계에 머물거나 분단 현실 속의 적대적 관계에 머물지 않고, 오랜 역사 속에 공존해온 특수관계라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자는 적어도 양자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교류와 협력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다. 물론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활성화 여부는 국내외 정치 변화에 좌우된다는 사실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셋째, 6.15선언은 남북합의서보다 더 나아가 남북한 관계에 공통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제 남북한 관계는 공존 가능성을 지닌 두 개의 개별존재라는 소극적 관계에서 서로를 아우르는 공통성을 지닌 공동존재라는 적극적 관계로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다.

넷째, 10.4선언은 이전의 성명과 선언의 내용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내외의 다양한 측면에 관심을 표했다. 그런 관심은 민족 내부적인 문화 등의 측면에서 시작하여, 민족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해외동포로 확대했다. 따라서 통일은 한반도 내의 한민족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재외동포(코리안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되었다.

다섯째, 판문점선언은 남북한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한편, 이를 위한 국제사회

7) 7.4공동성명 당시 북한의 주체체제 구축과 남한의 유신체제 구축이 동시대적으로 이뤄졌다.

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했다. 이로써 통일은 한반도와 지구촌에 산재한 한민족의 문제를 넘어서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의 연장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가령 한국의 경우, 아직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전환되는 현실이나, 통일담론이 후기단일민족담론 내지 다민족담론으로 변환되는 상황에 대해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통일의 범위가 외부적으로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문화사회의 현실이 내실화되지 못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민족과 관련된 인식이 다음과 같이 확장됨을 알 수 있다. 즉 당사자 → 특수관계 → 공동존재 → 한반도의 한민족과 재외동포 → 한민족과 세계화.

2. 기독교 통일담론의 도전과 기여

한국이 격랑의 근현대사를 거쳐 오면서, 민족주의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더구나 한국기독교는 초기부터 종교 본령의 선교사역 이외에, 민족주의와 근대화의 대의명분을 강력히 추구했고 이에 따라 다른 비서구국가에 비해서 신속하고 용이하게 외래종교에서 민족종교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한국기독교는 민족주의적 색채가 매우 강한 기독교이다.

그러나 한국기독교는 남북한 분단을 계기로, 해방 전 북한 중심적 기독교에서 해방 후 남한 중심적 기독교로 크게 변모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기독교의 민족주의는 반공적 민족주의의 특징을 강하게 나타냈다. 이런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한국기독교의 통일담론은 통일보다 반공을 우선시하는 경우까지 나타났다. 한국기독교는 한국사회의 반공세력 가운데 중심세력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8] 반공은 정치적으로는 안보로 이어졌고,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혹은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졌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기독교를 포함한 한국사회의 반공적 민족주의는 민족우선을 내세우는 다른 나라의 민족주의와는 달리, 안보 우선에 따른 외세 친화적 자세도 보였다. 최근 '토착왜구'담론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북갈등이 남남갈등으로 이어지고 다시 남남교회갈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기독교의 통일담론은 크게 양분되었다. 즉 통일과 평화를 강조하는 진보담론과 반공과 안보를 강조하는 보수담론으로 대별된다. 다시 말해, 한국기독교는 자체 내의 통일담론에 있어서 갈등을 해소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8) 강인철,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서울: 중심, 2007);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파주: 한울아카데미, 2015).

다. 그 결과 기독교 통일담론이 한국 통일담론을 선도하기보다 한국 통일담론의 특정 입장에 동조하거나 추종하는 양상을 보이고, 점차 사회적 영향력도 약화되고 있다. 최근의 이런 양상은 기독교 통일담론이 초기에 진보집단이 독점적으로 주도하면서, 비록 소수 입장이었지만 일관되게 영향력을 발휘한 것과는 대조를 이룬다.[9] 기독교 통일담론은 학문적으로는 발전하는데, 영향력에 있어서는 퇴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통일담론 내에서 기독교 통일담론이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그렇지만 기독교 통일담론이 한국 통일담론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 그 유산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 기여 가운데 주목할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동포기독교인의 역할이다.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 기독교인의 만남의 물꼬를 튼 것이 바로 한반도의 경색국면을 타개하고자 했던 해외동포기독교인이었다. 해외동포가 통일문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초로, 남한의 정부 통일정책이 통일에 있어서 해외동포에 대해 공식 언급한 것보다 무려 30년 전 일이다. 1981년 '조국통일기독자회의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통일대화'(조국통일에 관한 북과 해외동포, 기독자간의 대화)가 바로 그것이다.[10]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일천하지만, 최근 『기독교사상』의 인터뷰 등을 통하여 내부 사정이 밝혀지기 시작했다.[11] 그런데 이 사건은 이후 한국 통일담론에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전거가 되었다.

먼저, 해외동포기독교인의 만남은 민족과 통일 관계에서 민족 범위를 확장하여 세계사적인 차원을 부각시켰다. 다시 말해 통일은 한반도 내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외의 문제이고, 문제해결도 남북관계만이 아니라 한반도 내외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12] 이런 시각의 중요성은 거시적으로는 남북관계를 위한 6자

9) 가령 한국의 통일운동을 열고 결정적인 통일담론을 개발한 주요 세력 중 하나가 바로 교회일치와 인류갱신(혹은 인류일치)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입장이 한국교회의 신학 이해와 교회 정치의 역기능으로 말미암아 한국 통일담론과 기독교 통일담론의 대세로 정착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10) 김흥수,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 『선교와신학』 35(2015), 101. (83-115).

11) 이영빈, 김순환, 김흥수, "자료 소개: 이영빈, 김순환과의 대담—독일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1)", 『기독교사상』 725(2019.05), 52-70; "자료소개: 이영빈, 김순환과의 대담—독일에서의 한국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2)", 726(2019.06), 87-108.

12) 최근의 해외동포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편, 『평화로 숨쉬다: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화해평화 좌담회, 2015년 1월~2019년 5월』(서울: 미국장로교 한국선교회, 2019).

회담, 미시적으로는 국제적 월경(越境)사건으로 부각된 북한이탈주민 사역과 해외 한인교회의 통일운동 참여를 통해 입증된다. 오늘날은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교회를 넘어서 사회의 과제가 되었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한국기독교가 담당한 초기의 역할은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 사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북한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관련 연구도 활성화되었다. 가령 북한교회사 연구, 기독교사회주의 연구, 이주 및 다문화 문제의 일환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 연구, 북한이탈주민과 통일 연구, 북한선교와 남북한평화통일운동 연구 등이다. 이런 연구들은 모두 북한학과 통일학 등의 토대가 되었다. 북한학과 통일학의 연구자 중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이 많은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또한, 해외동포기독교인의 만남은 주체사상과 기독교 관계를 연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주체사상에 대한 입장차에 상관없이, 주체사상이 북한의 공식적이고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요 세계관이라는 점에서, 통일 관련 연구는 어떤 것이든 간에 이 주제를 무시할 수 없다. 이 주제를 거론하기 시작한 것이 해외동포기독교인의 만남이었고, 이후 남북한기독교인의 만남으로 이어졌고 다시 통일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통일신학자인 박순경이 주체사상을 논하던 중 교황론과 수령론을 비교한 것이 문제가 되어, 구속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13] 그런데 주체사상 연구는 기독교 통일담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 주제가 해외동포기독교인의 만남을 통해 일찍부터 다뤄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연구 전통과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에서 진화된 것으로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종교성을 띤 사상이라고 평가되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중으로 주체사상에 접근할 수 있다.

한편으로 세계기독교는 기독교와 공산주의 혹은 기독교와 마르크시즘(Marxism)의 대화라는 연구 전통이 있는데, 한국기독교가 이런 전통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다.[14] 다만 한국기독교는 분단 및 냉전 상황에서 기독교와 마르크시즘의 대화 분야에 거의 참여하지 못해 관련 연구가 거의 축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마저 주로 무신론, 종교박해, 반(反)자본주의 등에 치우쳐, 정작 이데올로기요 세계관으로서의 공산주의에 대한 연구는 더욱 부족한 형편이다. 그런데 세계기독교의 주요기관 중 하나인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13) 안교성, 『한국 교회와 최근의 신학적 도전』(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134.

14) 선구적인 연구 가운데 하나로는 서구의 신학자와 동구의 목회자가 나눈 서신 모음집인 다음 책을 볼 것. Karl Barth & Johannes Hamel, *How to Serve God in a Marxist Land*, with an introductory essay by Robert McAfee Brown(New York: Association Press, 1959).

는 1948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냉전 시대가 시작되는 가운데 출범하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기독교는 특정 이데올로기의 편이 아니라, 모든 이데올로기에 대하여 비판적인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15] 한국 기독교는 이런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맹목적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결합 속에서 객관성을 상실하기 쉬운 한국사회와 한국 통일담론에서 일종의 참여적 비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16]

다른 한편 주체사상의 종교성은 기독교 통일담론이 놓쳐서는 안 될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분야의 선구적 학자들 가운데 기독교 학자나 기독교 배경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17] 가령 임순희는 북한 주민의 종교성을 분석하면서, 공적 공간에서는 주체사상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만, 사적 공간에서는 전통종교의 영향이 여전히 강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는다.[18] 이런 결론은 주체사상이 종교로서는 후발주자이기에 아직 전통종교와의 조우 단계에 있고, 주체사상과 전통종교의 관계는 표면구조와 심층구조처럼 중첩 현상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19] 따라서 전통종교는 남북한의 민족동일성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한편 안신은 종교학의 입장에서 평화통일은 종교인의 참여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남북한 종교 즉 북한의 주체사상과 남한의 제(諸)종교 간의 관계 모델로 개종(복음화), 대화, 협력, 변혁 모델을 제시하면서 특정 모델에 의존하기보다 다차원적으로 조화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

둘째, 이밖에도 기독교 통일담론은 남북한 관계를 신학, 특히 성서학 분야에서 이해하려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런 노력은 비교적 일찍부터 시작되어

---

15) World Council of Churches,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The Amsterdam Assembly Series, Book III.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 195.

16) 민족주의와 이데올로기의 결합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전재호, 『반동적 근대주의자 박정희』 (서울: 책세상, 2000), 29-34.

17) 관련 분야의 비교적 선구적 연구는 각각 다음 책들을 볼 것. 맹용길, 『기독교의 미래와 주체사상』(서울: 기독교문사, 1990);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서울: 통일연구원, 2000).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 책을 볼 것. 정대일, 『북한 국가종교의 이해: 북한 선교의 선이해를 위한 연구』 (서울: 나눔사, 2012); 박철호, 『기독교 효 체계에 의한 북한 주체사상 효 분석』(서울: 나눔사, 2012).

18) 임순희, 『북한 주민의 종교성: 북한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 2016).

19) 여기서 심층구조(deep structure)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는 변형언어학의 용어를 원용한 것으로, 공산주의의 유물론에 나오는 하부구조와 상부구조와는 조금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

20) 안신, "남북한 평화 통일과 한국 종교의 다양한 모델들: 개종, 대화, 협력, 변혁의 모델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25(2010), 207-232.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해방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는 출애굽기가 특별한 관심을 받았다면, 분단기에는 한반도 분단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 분열사와 관련된 성경이 특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연구들은 주로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단기에도 어떻게 민족적 동일성을 유지했는가를 밝힘으로써, 한반도의 사례에 원용하려고 한다. 초창기 사례로는 민영진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민영진은 "민족적 일체감이 분단을 극복"(사무엘하 5장 1-3절)이라는 칼럼에서 "다윗이 통일에 대한 재론이 불가능할 것 같은 위기들에 대처하면서, 남북 지파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 했던 노력에 대해 밝혔고,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친족 의무 수행 관계: 구약에 나오는 '기업 무를 자'"(룻기 2-4장)라는 칼럼에서 "국제 사회에서 남북 간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물으면서 "친족으로서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돕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21] 최근의 예로는 배희숙의 "에서/에돔-야곱/이스라엘 관계에 나타난 통일신학의 기초"를 들 수 있다. 배희숙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20년이 넘는 분열의 시간을 가진 에서와 야곱의 깊은 갈등을 분석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갈등과 경쟁을 넘어서 화해와 상생의 삶을 이뤄내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 방법으로 "자기 이해"가 중요하기에 "우선 관심의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통일된 한국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으면서, "독일의 통일은 예고 없이 이루어졌지만 그들은 각 영역에서 이미 통일을 감당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실질적인 통일에 이르기까지 20여 년간 동서독인 모두에게 큰 짐이 되었다"고 밝힌다.[22] 이런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기독교가 일제강점기 말기에 묵시문학을 통하여 마지막까지 광복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종교적 상상력 가운데 미래를 기다렸듯이, 통일을 앞둔 지금도 통일담론을 통하여 통일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종교적 상상력 가운데 미래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분단 혹은 통일에 대한 신학적 연구는 '희년'(禧年, the jubilee year) 연구로 이어지는데, 희년신학은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

21) 안교성, 『한국 교회와 최근의 신학적 도전』, 136-137.

22) 배희숙, "에서/에돔—야곱/이스라엘 관계에 나타난 통일신학의 기초", 배희숙 외, 『(제1회 평화통일신학포럼)평화통일신학: 신학적 근거의 모색』(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015), 43.

Ⅲ. 평화와 기독교 통일담론

1. 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정부 통일정책은 7.4공동성명부터 두 번째 주제인 평화를 내세웠다. 이 주제는 7.4공동성명과 더불어 통일정책에 있어서 역사적 이정표가 된 남북합의서에서 화해로 확산되었다. 7.4공동성명은 냉전시대의 중간기라 할 수 있는 냉전 해빙기에 나왔다면, 남북합의서는 냉전시대의 종식기 혹은 일대변혁기라 할 수 있는 동구 공산권 붕괴 및 통독이라는 새로운 국제환경 가운데 나왔다. 1990년대만 해도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상징되는 동구공산권 붕괴가 전 세계로 퍼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산주의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에서 예상외의 건재함을 보여왔다. 대신 이데올로기 중심의 냉전이 종식하자, 전 세계에는 새로운 갈등이 대두되었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로 이전부터 점증되던 종교갈등과 인종갈등이 격화되었고, 세계적 차원에서는 주로 핵 갈등과 환경 갈등이 주목받았다.[23]

이런 과정에서 정부 통일정책은 평화의 개념 자체를 확장·발전시키기보다는 평화의 현실적 과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대표적인 것은 비핵화와 평화 실천이다. 핵에 대해서는 남북합의서 이듬해에 나온 비핵화선언이 있다. 평화 실천에 대해서는 10.4선언에서 평화수역을 언급했고, 이후 군사분야합의서를 통해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언급했다. 즉 군사분야합의서는 적대행위(무력 및 군사연습) 중단, 평화지대 및 평화수역 설정, 교류협력 및 접촉 활성화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대책 및 조치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 통일정책은 문서상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답보상태에 있다. 한 가지 예가 바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평화협정 체결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핵과 평화협정 등 핵심사안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상황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예상조차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이 있다. 첫째, 통일 여정이 늦어지면서, 최근에는 평화와 통일의 관계를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난다. 양자가 갈등관계나 주종관계(혹은 선후관계)가 아니라 동반자적 관계와 협력관계가 되어야만

23)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주목받기도 했지만, 오바마 같은 이는 전세계의 무슬림에게 다가가고자 하면서 "문명의 충돌을 분명히 서로 다르지만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간의 협력이라는 비전으로 대체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미로슬라브 볼프, 김명윤 역, 『광장에 선 기독교: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서울: IVP, 2014), 97.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24]

둘째, 정부 통일정책이 평화를 화해로 개념을 발전시켰지만, 막상 평화론도 화해론도 한국사회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제임스 페이지(James Smith Page)의 비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페이지는 국제연합(UN)이 정한 "국제평화문화의 해"(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2000)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첫째, 평화문화 개념을 다루면서, "수사적인 심지어 설교식의 경향"(a tendency to become rhetorical and even sermonic)이 있는데, 너무 지당하면서도 현실감 없는 이야기만 되풀이하여 "평화피로증후군"(paece fatigue)이 생긴다. 둘째, 평화문화를 "비언어적인 소통"(a non-verbal communication)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다시 말해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모델링"(modeling)인데, 과연 누가 세계적·일상적 차원에서 모델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셋째, 이런 접근이 자칫하면 "세계화된 사회"(global society), 특히 "전지구적 자본주의"(global capitalism)와 연관된 대규모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대체하는 효과가 될 수 있는데, 자칫 평화에 대한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접근"(an individualistic and bourgeoisified approach)에 그칠 뿐 구조변화의 중요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 [25]

셋째, 한반도는 핵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지역이면서도, 비핵화의 기초가 될 반핵운동이 활발하지 못하고 반핵론이 부진하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탈핵화 노력도 장기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핵화의 명분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서, 비핵화의 의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오히려 남한의 핵무장론이 자주 거론되는 형편이다. 따라서 비핵화와 관련된 반핵운동, 반핵연구, 반핵정책의 균형 잡힌 발전이 요청된다.

넷째,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갈등지역으로 위기가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이나 반전운동이 매우 부진하다. 사실 역사적으로 전쟁 상황에서는 평화가 반전으로, 심지어 반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반도가 끊임없는 전쟁을 겪어왔기 때문에 평화운동이나 반전운동이 자라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이다. 이런 맥락에서 초기에 평화와 연관된 통일담론이 수난

24) 서보혁·정주진,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과천: 진인진, 2018), 211-223. 통일운동과 평화운동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룬 간략한 입문서는 다음을 볼 것. 김창수, 『멋진 통일운동 신나는 평화운동』 (서울: 책세상, 2000).

25) James Smith Page,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Was It Worthwhil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3(2001), 349. (348-351).

받은 것이 사실이다.[2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국내의 평화운동이 성숙해야 남북한 간의 평화운동 및 통일운동의 토대가 될 수 있는데, 관련 운동이 전반적으로 발육부진 상태에 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평화와 관련된 인식이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즉 평화 → 화해 및 교류·협력.

2. 기독교 통일담론의 도전과 기여

평화는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핵심사상이었다.(물론 종교에는 폭력의 측면도 있다.)[27] 기독교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의 왕으로 묘사되었고, 제자들에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기독교 통일담론을 포함한 기독교 신학이 평화담론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항상 평화담론 연구에 열심을 내거나 실천한 것은 아니다. 거칠게 말해,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소수집단이거나 비주류일 때는 평화주의적 입장을 지녔지만 다수집단이나 주류일 때는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기독교는 전반적으로 주류사회와 더불어 정당전쟁(just war)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종교가 사회 내의 다수집단이나 주류가 되면서 주류사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통합기능을 맡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된다. 즉 다수집단이 된 종교와 주류사회는 공조한다. 다시 말해, 종교는 일반적으로 소수집단일 경우는 사회개혁세력으로, 다수집단일 경우는 사회통합세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종교가 다수집단이면서도 사회개혁세력이 되기란 어렵고, 만일 그런 역할을 수행할 경우는 종교 전체가 아니라 종교 내의 특정집단이 맡기가 십상이다.[28] 이런 집단은 성서의 표현을 빌면, 예언자이다. 기존 신학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3중 직분인데, 바로 왕(지도 및 유지 기능), 제사장(통합 기능), 예언자(개혁 기능)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회의 지도자로만, 화해자로만, 혹은 비판자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상황에 따라 강조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다. 기독교 사회윤리의 복잡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즉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는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 기능을 강조하게 된

---

26) 통일담론 특히 평화와 연관된 통일담론의 수난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김상웅, 『통일론 수난사』(서울: 한겨레신문사, 1994); 이재봉, 『이재봉의 법정 증언』(서울: 들녘, 2015).

27) 종교와 폭력 및 평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볼 것. 김명희, "종교·폭력·평화: 요한 갈퉁의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종교연구』 56(2009), 121-148.

28) 그런 면에서 올해 100주년을 맞는 삼일운동에 있어서 당시 한국기독교가 대다수 운동에 참여하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친 것은 국가적 책임감, 메시아사상(messianism) 이외에도 소수종교집단이었다는 점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 그렇다면 한국기독교는 현재 어떤 집단이고, 어떤 기능을 맡고 있고, 어떻게 다양한 기능들을 조정하여 바람직한 종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가?

한국기독교가 평화운동에 헌신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당연하다. 그러나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기독교 일부가 평화운동에 매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한국기독교의 전반적인 모습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평화운동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생래적으로 현실적으로 소수운동으로 남기 쉽다. 한반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기독교 평화운동은 한반도의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에 기여하기에 앞서 기독교 내의 평화운동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기독교 통일담론은 평화와 통일에 있어서 어떻게 기여하는가? 첫째, 세계교회협의회 등 에큐메니칼 운동 중심의 진보진영은 처음부터 평화와 통일을 연계하면서, 평화통일운동 담론을 정착시켰다.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통일이나 평화를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형편이었지만, 진보진영은 정부 간 통일정책이 답보상태를 면하지 못한 상황에서 파격적인 행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했다. 해외동포 및 남북한기독교인의 만남, 방북 등 일련의 사태는 정부의 간섭과 탄압을 받았지만, 결국 민간의 통일 문제 참여의 문을 열었다. 이런 담론은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이하 88선언, 1988)으로 꽃을 피웠다. 김흥수는 88선언은 정부의 7.4공동성명을 수용했고,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 특히 7.7선언에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29] 이 선언은 정부 통일정책의 기존 기본개념인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존중하는 한편, 인도주의와 민간 참여라는 새로운 기본개념을 제시했다. 김흥수에 의하면, 이 선언은 통일방안과 통일국가 수립과정을 논의하지 않고 주로 정부와 민간 간의 통일주도 문제 등에 집중했다.[30] 여하튼 이 선언은 통일방안에 있어서 기독교 통일담론이 정부 통일정책 등 한국 통일담론을 선도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선언은 대외적으로는 큰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원교단의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이런 양상은 통일담론이 통일전문가의 문제를 넘어 일반 교인의 문제로 비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령 이 선언은 평화협정을 직접 주장하기보다는 당사자("남북한 당국과 미국, 중공 등 참전국들")들의 행동을 촉구하는 모양을

29) 김흥수,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 101-104. 7.7선언은 6가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선언했는데, 1번은 민간 교류, 2번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언급한다. 88선언의 5개 원칙 중 4,5번이 7.7선언의 1,2번과 같은 관점을 보인다.

30) 위의 글, 103.

취했으나, 미군철수 등 민감한 문제와 연결되면서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선언에 대한 반대를 야기하였다. 이런 위기감은 현재에도 작용하여, 통일담론에서 평화를 논하는 것 자체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자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가령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은 독자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후속 성과 가운데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을 손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역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향은 크지 않았다. 그것은 문건 작성 과정에서 새로운 지도층의 참여나 새로운 세대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가령 이 선언 끝에는 "아래에 명기된 회원들과 모든 총대들은 이 선언문에 한반도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인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고통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바이다"라는 소수의견이 첨부되었다.[31] 이 선언의 전반적인 내용은 1980년대 이후 활동한 에큐메니칼 통일전문가 1세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기독교 통일담론은 88선언을 정점으로 한국 통일담론을 선도하는 모습이 점차 줄어들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기독교 내부의 통일담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다. 더구나 기독교 보수진영이 참여하면서, 기독교의 통일운동 참여폭은 늘어났지만,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하지 못했고, 기존의 진보진영의 통일담론에 필적할 만한 획기적인 담론도 창출되지 못했다. 나눔운동 등 통일운동은 활성화되지만, 통일담론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또한 교회 이외의 민간 분야의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이들의 참여가 급속도로 증가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운동의 개신교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기독교의 사회적 지도력이 축소되었고 교회와 여타 민간 분야의 교류도 소원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한국기독교는 한국 통일담론의 장에서 지도자에서 토론자의 일원으로 역할 변경을 신속히 이루는 한편 교회와 사회의 소통과 협력을 회복해야 할 전환점에 놓여있다.

둘째, 기존의 에큐메니칼 진영의 통일담론 이외에 새로운 평화운동이 전개되면서, 평화운동과 통일운동의 결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평화운동은 한편으로는 평화학의 대두와 연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교회 운동과 연결된다. 그러나 양자의 배후에는 재세례파 전통(혹은 과격한 종교개혁운동) 가령 퀘이커교와 메노나이트파 등이 자리잡고 있어, 양자는 구분되면서도 긴밀하다. 퀘이커교는 평화사상가 함석헌을 통해 한국과 관련을 맺어왔지만, 아직까지 활발하지는

31)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선언"(2013년 11월 의결),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 2013.

않다. 메노나이트파는 1950년대에 한국선교를 시작했다가 1970년대에 철수했는데, 최근 한국 내에서 메노나이트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활동을 재개하였다. 통상적으로 한국기독교 내에서 북한선교와 남북한평화통일운동이 양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메노나이트파가 북한선교에 평화운동을 접목시키려는 시도에 참여하고 있다.[32] 뿐만 아니라, 최근 주로 메노나이트파가 주도하고 있는 평화학을 연구한 평화운동가들이 대거 귀국하면서, 한국 내에서 평화운동과 평화학의 확산에 힘쓰는 집단을 이루고 있다. 한편 한국기독교 내 중도파에 해당되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은 2016년 북한선교와 남북한평화통일운동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남북한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한 바 있다.[33] 한국기독교는 이런 맥락에서 평화교육과 통일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다. 정부가 평화만들기(peace-making), 평화유지하기(peace-keeping) 등 거시적인 문제해결에 유리하다면, 기독교 등 시민운동은 평화세우기(peace-building) 등 미시적인 문제해결에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평화세우기 가운데 평화 만드는 사람 키우기(peace-maker-equipping)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평화문화 만들기와 평화교육이 필요하다. 평화문화 만들기와 평화교육은 학교와 민간단체는 물론이고 개인과 가족이 중요한데, 특히 가정을 평화운동의 출발점으로 강조한 엘리즈 불딩(Elise M. Boulding)의 통찰력이 최근 국내 연구에서 관심받고 있다.[34]

셋째, 위의 움직임과 연결되면서도 종교와 평화학을 연결시키는 '종교평화학'가 대두되고 있다. 평화학이 서구 기독교사회의 배경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기독교 색채도 강하지만 타종교로도 확산되고 있다. 이찬구는 종교평화학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논문에서 종교적 가르침과 평화학이 같은 내용을 가르친다고 주장하면서, 평화학을 "세속화 시대의 신학"이라고 부르고 또한 평화를 한국 신종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개벽"과 비교하고 있다.[35] 이재봉은 종교와 평화의 관계를 다

32) Chris Rice, "Contested South Korean Identities of Reunification and Christian Paradigms of Reconcili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 Research*, 42/2(April 2018), 1333-142.

33) "남북한 선교와 평화통일을 위한 지침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01회총회, 2016.

34) 엘리즈 불딩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볼 것. Elise Boulding, "Peace Culture: The Problem of Managing Human Difference", *Cross Currents,* 48/4(Winter 1998/1999), 445-457; Birgit Brock-Utne, "The Centrality of Women's Work for Peace in the Thinking, Actions, and Writings of Elise Boulding", *Journal of Peace Education*, 9/2 (August 2012), 127-137; Carolyn M. Stephenson, "Elise Boulding and Peace Education: Theory, Practice, and Quaker Faith", *Journal of Peace Education*, 9/2 (August 2012), 115-126. 콜로라도 대학교 아카이브에 그의 문고가 있다.

35) 이찬구, "종교평화학의 모색: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종교교육학 연구』 14(2013), 145-169.

루면서 원불교가 목표와 과정에서 비폭력과 평화를 중시한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원불교가 언행일치의 종교라고 평가한다.[36]

그러나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가 평화와 관련하여 기독교 통일담론에 기여하고자 할 경우, 유의할 점이 있다.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말처럼, 종교가 평화를 만드는 역할을 맡으려면, 먼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종교 내, 또한 종교 간 대화와 화해의 모습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37] 특히 종교가 평화의 담지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기 쉽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페이지의 모델링에 대한 지적을 다시 한 번 기억할 필요가 있다.

V. 인도주의 및 민간 참여(민주, 민중)와 기독교 통일담론

1. 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7.4공동성명은 통일의 주체로 자주, 민족[적 대단결]을 언급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민족은 정부를 의미했고, 그것은 정부의 통일문제 독점으로 이어졌다. 그런 사정은 이 자리에서 상술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맥락에서 통일운동과 통일담론의 확산은 정부 독점을 타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물꼬를 튼 것이 바로 해외동포기독교인들이었다. 일반적인 학계의 공감대에 의하면, 당시 북한은 세계 진출을 도모하던 차라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이 만남에 나왔으나, 남한은 대응방식이 달라 남한기독교인의 참여를 금지하였고 결국 모임을 주최한 해외동포기독교인들이 남한기독교인까지 대신하는 격이 되었다. 여하튼 이 모임은 에큐메니칼 기구와 에큐메니칼 교회의 방북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남북한교회의 극적인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교회 내 진보진영의 참여에서 보수진영의 참여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여타 종교와 민간 부분의 참여를 가져왔다. 보수진영은 진보진영의 통일문제의 주도 내지 독점을 우려하여 여러 가지 상응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통일의 정치성은 통일의 자율성을 압도하였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정권교체에 따라 이전의 정부 통일정책을 여반장처럼 뒤집는 일이 거듭되었다. 한마디로 기준 자체가 계속 흔들린 것이다. 10.4선

36) 이재봉, "종교와 평화: 원불교의 비폭력성", 『원불교사상과종교문화』 78(2018), 235-261.
37) 최병환, "평화문화와 종교 간의 대화", 『평화학연구』 1(2004), 61-83.

언이 기존의 성명 및 선언을 재확인한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따라서 남북한 정부와 정치권은 최소한 단독 혹은 공동으로 작성한 공식 성명, 합의서, 선언만이라도 그 내용을 존중하여 유산을 이어가야 하고, 그럴 때 통일문제의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스스로의 공식 약속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통일과정은 시지푸스(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끝없는 되풀이 현상을 방불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이점을 거듭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이런 통일정책에 대한 태도의 변덕에 따라 민간 경제활동 등을 포함한 민간 통일운동 전반이 좌우되었다. 따라서 88선언 같은 민간 선언이나 7.7선언 같은 정부 선언이 민간 참여에 대해서 거듭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정부 종속화 현상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의 남북한 관계 개선 노력도 이런 현상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은 밝지 않다. 시민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민간 참여의 자율성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 공히 통일문제와 관련된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간을 거의 마련하지 못했다. 가령 남한은 통독 이전의 서독과 달리,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독자적인 공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서독교회는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통독까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통독에 기여했다. 북한도 통독 이전의 동구공산권국가들과 달리, 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독자적인 공간을 거의 확보하지 못했다. 동독을 비롯한 동구공산권국가는 공산권 붕괴 이전부터 여러 차례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른 정치변동이 있었고, 민주화를 추구하는 민주화 시민세력이 등장했으며, 국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유럽의 전통종교인 그리스도교가 일정한 역할을 감당했다.[38] 예를 들어, 폴란드의 가톨릭교회와 동독의 개신교회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의 발전과 독자적인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상기시킬 필요가 있는 동시에, 스스로도 시민사회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동구공산권 국가의 재건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존재 여부와 성숙 정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북한의 시민사회의 발전은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인도주의의 문제도 전반적으로 민간 참여의 양상과 대동소이하다. 남북한 관계가 안정되지 못한 가운데 이용 가능한 사역이 구호사역이라는 점에서, 인도주의

38) Niels C. Nielsen, *Revolutions in Eastern Europe: the Religious Roots*(Maryknoll: Orbis, 1991).

는 구호사역의 영역 안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인도주의 역시 통일문제의 민간 참여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정부 종속화 현상을 나타냈다. 많은 경우, 인도주의는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 및 대안 마련과 연관되는데, 통일문제가 정부 종속화 현상을 보임에 따라 인도주의도 한계를 보이면서 정작 필요한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령 북한인권 문제도 사안 자체보다 그것의 정치적 함의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인도주의는 미시적 관점에서 사역 성과를 주목해야 하지만, 동시에 거시적 관점에서 장기적인 방향 제시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인도주의 및 민간 참여와 관련된 인식이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정부 독점 → 민간 참여 및 정부 주도.

2. 기독교 통일담론의 도전과 기여

한국기독교 특히 진보진영이 통일담론의 민간 참여에 있어서 여러모로 물꼬를 튼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통일문제에 있어 후발주자로 참여하기 시작한 보수진영은 진보진영과 신학적 입장은 달랐지만, 진행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 이들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한 일종의 대응기구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연합기구를 만들면서 조직을 구성했고, 북한의 정권과 일반 주민을 분리함으로써 정치적 화해 없이도 북한에 접근할 수 있는 과도적인 화해담론을 만들었으며, '사랑의 쌀 운동' 등 구호사업을 통한 교류를 시도하였다. 이런 과도적인 화해담론 즉 북한[정권]은 적으로 보되, 북한 주민은 동포로 보자는 논리는 강원용 같은 진보인사나 한경직 같은 보수인사나 모두 공유한 사상이었다.[39] 양 진영의 대북접근방법의 유사성 특히 남북경색국면 속에서 거의 유일한 사역이 구호사역으로 제한된다는 현실은 21세기의 전환기에 남북나눔운동의 공동창출을 가능케 했다.[40] 이 기구가 예상만큼 큰 영향력을 보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양 진영의 연합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기독교는 구호사역과 같은 대북교류를 시도하는 한편, 민간 참여 담론을 구체화하였다. 그것은 크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기독교는 민간 참여에 있어서 민간이란 개념이 단순히 중립적인 시민이란 개념을 가리킬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 속에서 민주 및 민중 개념과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

39) 박명림·장훈각, 『강원용 인간화의 길 평화의 길』(서울: 한길사, 2017), 302; 하충엽, "한경직 목사의 북한선교사역", 김은섭 편, 『한경직 목사의 사상과 사역』(서울: 나눔사, 2014), 371-373.
40) 홍정길 외, 『화해와 평화의 좁은 길: 남북나눔이 걸어온 20년』(서울: 홍성사, 2013).

였다. 전자는 선민주화 후통일 혹은 선통일 후민주화 등으로 전개되던 이전의 통일담론을 이어받은 것이고, 후자는 시민주도적 통일담론에서 소외되기 쉬운 민중에게 발언권을 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기독교는 통일담론이 정치적 논의 차원에서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동했는데, 특히 '사람의 통일' 담론이나 북한이탈주민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41] 셋째, 한국기독교는 동구공산권붕괴와 더불어 기존의 북한선교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새로운 공산권선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이런 관심은 사회주의 체제전환 연구로 이어졌다.[42] 이와 연관하여 북한의 통일후 변동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면서, 구(舊)동구공산권 국가의 신학자와의 교류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다.[43] 이런 신학적 교류는 동구공산권 국가가 지난 30년이라는 과거에 경험한 후기공산주의(혹은 후기사회주의) 현실이 장차 북한이 통일 이후라는 미래에 겪을 현실과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전망할 때, 일종의 미래학적인 투사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후기공산주의사회 재건과정에서 공산주의 및 인종갈등을 해결하고자 "포용과 배제"라는 화해론을 제시한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의 담론이 유행하는 등, 화해론이 기존에 주로 선교학에 머물렀던 경향에서 기독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기독교 통일담론의 중요한 관점이 되는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44] 한 예로 한국기독교의 모든 학회가 참여하는 한국기독교학회는 2012년 제41차 정기학술대회 주제로 "통일과 화해"를 정한 바 있다. 넷째, 한국기독교는 동구공산권 국가의 교회 중에서도 동독교회의 경험에 집중하는데, 이런 연구결과가 한국 통일담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서독교회의 경우, 동서독 분단 이후에도 상당 기간 하나의 교회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서독교회의 일치를 유지했고, 그런 상태를 더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양자의 "특별한 유대관계"를

41)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전우택 외, 『통일 실험, 그 7년: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살이 패널연구』(서울: 한울, 2010).

42) 관련 분야의 초기 연구로는 다음 책을 볼 것. 김회권 외,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기독교』(서울: 한울아카데미, 2012).

43) Ábrahám Kovács & Jaeshik Shin, eds., *Church and State: Theological Reflections in the Hungarian Reformed Churches and in the Korean Protestant Churches*(Debrecen; Gwangju: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2019); Jaeshik Shin & Ábrahám Kovacs, eds., *Nationalism, Communism, and Christian Identity: Protestant Theological Reflections from Korea and Hungary*(Debrecen; Gwangju: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2019).

44) 이동춘, 『한반도 통일 논의의 신학담론, 정치신학에서 화해신학으로』(서울: 나눔사, 2017); 이상은, 『화해론에 기반한 통일』(서울: 나눔사, 2017).

천명한 바 있다.[45] 그러나 현재 한국기독교는 북한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마저 이루지 못한 상태이다. 다섯째, 한국기독교는 한국의 각계각층, 가령 시민사회, 교회, 차세대 등에 통일담론을 확산하는 일에 기여했는데, 특히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서 그런 작업을 수행했다.[46] 여섯째, 한국기독교는 정치신학 등을 통해 신학적 발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정책적 현실성을 겨냥하면서 라인홀드 니버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다시금 관심을 보였다. 과거에 강원용이 민주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독교 현실주의를 한국에 적용하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통일담론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47] 따라서 이런 현실론적인 입장은 기독교 통일담론이 장차 통일운동, 통일연구, 통일정책에 대해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의할 때,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Ⅵ. 번영(이익과 번영)과 기독교 통일담론

1. 정부 통일정책의 변화

정부 통일정책이 내세운 또 다른 주제는 번영이다. 어쩌면 오늘날 통일담론이 통일당위론에서 통일현실론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부합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번영은 통일의 미래 방향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노선을 보여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즉 현시점에서 통일 시나리오는 매우

45) 김영동,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향 연구", 안교성 편, 『(제2회 평화통일신학포럼)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전망: 신학적 성찰과 과제』(서울: 나눔사, 2016), 51-56.

46) 시민사회, 교회, 미래세대 등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한반도평화연구원,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증오와 배제의 논리를 넘어 포용과 화합의 마당으로』(서울: 새물결플러스, 2014); 소망교회, 『교회 내 통일선교하기: 소망통일컨퍼런스 자료집』(미간행자료집; 서울: 소망교회, 2017); 양금희 외, 『우리의 So One은 통일!: 어린이용』(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016). 또한 교육과 훈련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김도일, 『조화로운 통일을 위한 기독교교육』(서울: 나눔사, 2013); 양금희,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기독교 통일교육』(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8). 이밖에 국경선평화학교 출판부가 국경선평화학교(Border Peace School: BPS)에서 행해진 강의와 연구 내용을 책으로 발간하는 BPS평화문고를 볼 것.

47) 강원용의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다음 책을 볼 것. 박근원, 『여해 강원용 목사 평전』(파주: 한길사, 2017), 481-502; 박명림·장훈각, 『강원용 인간화의 길 평화의 길』, 295-312. 또한 기독교 현실주의를 대안적 시각으로 제시하는 다음 책을 볼 것. 남태욱, 『한반도 통일과 기독교 현실주의: 라인홀드 니버를 중심으로』(서울: 나눔사, 2012); 유경동, 『남북한 통일과 기독교의 평화』(서울: 나눔사, 2012).

모호하고 빈약한 편인데, 그나마 번영이란 주제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번영의 개념 안에 통일현실론과 통일의 미래가 수렴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맥락에서 통일대박론과 통일쪽박론,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등 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통일담론이 유행했다.

정부 통일정책은 비교적 초기부터 번영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7.4공동성명은 세 가지 주제 중 민족적 대단결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민족과도 연관되지만 번영과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통일이 분단 상황, 그것도 적대적인 분단 상황을 극복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분단 상황으로 인한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통일이라는 점에서, 민족적 대단결에 대한 의사표명은 실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민족 번영의 전제요 토대이기 때문이다. 뒤이은 남북합의서는 제목에서부터 교류·협력을 내세웠고, 최초로 구체적으로 이익과 번영이라는 문구를 사용한다.[48] 통일은 한반도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실천방안으로는 교류와 더불어 경제 협력, 균형 발전, 문화 협력, 인도적 협력 등 다방면에 걸친 것으로 설명한다. 번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 발전 전체와 연관된 것이고, 이런 분야는 민간 참여가 필수적이다. 10.4선언에서는 역시 제목에서 평화번영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역사, 문화, 민족 내부 및 해외동포의 교류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9월선언에서는 상호호혜와 공리공영, 환경협력, 남북화해와 단합을 내외에 과시하기, 더구나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공동주최하는 등의 안건이 제시되었다. 특히 3.1운동에 대해서는 북한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 공동안건으로 제시한 것은 전향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사실상 남북교류의 범위를 전 사회적인 것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정부 통일정책이 초기부터 번영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이것은 민간 참여이란 주제만큼 정부 독점 현상에 대해서 위협적이거나 민감한 주제가 아니다. 둘째, 이것은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이기에, 현시점에서 상대적으로 갈등을 피할 수 있다. 셋째, 이것은 이와 관련하여 반론을 낼 이유가 거의 없다. 넷째, 이것은 국민 등 당사자의 호응을 이끌기에 가장 매력적인 통일담론이다.

문제는 번영의 내용 및 진정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다. 다시 말해, 어떤 형태

48) 기독교 연합기구인 남북나눔운동이 교류 및 협력의 전환점이 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 특히 민족화해와 번영에 대하여 다룬 것은 다음 책을 볼 것. 남북나눔운동 연구위원회 편, 『21세기 민족화해와 번영의 길: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중심으로』(서울: 크리스챤서적, 2000).

의 번영인가 하는 문제이다. 큰 줄기만 생각해본다고 해도, 번영의 방향과 번영의 분배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첫째, 후기공산주의 연구에 의하면, 가혹한 체제 변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하여, 과거에 공산주의의 논리를 강제했던 것을 볼셰비즘이라고 불렀듯이 최근에 시장개방의 논리를 강제했던 것을 시장 볼셰비즘(market bolshevism)이라고 부른다.[49] 통일 한국에 맞는 적절한 번영시나리오가 나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게 익숙한 독일의 통독 과정의 경우, 구(舊)동독에서 드레스덴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들고 있지만, 여타 지역도 동일한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다. 또한 구(舊)동구공산권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번영의 과실(果實)은 소수에게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다수의 소외를 해결하려던 공산주의의 실험이 실패함에 따라 다수의 소외가 더욱 가중되는 상태가 되고 말았는데, 공산주의 시절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과거에 대한 향수와 좌절감을 드러낸다는 연구결과가 많고, 이런 현상은 통일 후 통합이 왜 어렵고 오래 걸리는가를 시사해주고 있다. 또한 토지개혁, 토지재산권 회복 등의 문제도 구(舊)동구공산권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즉 지역별, 계층별, 사안별로 통일의 과실 분배가 차이나는 것은 통일 후 통합에 있어서 큰 문제로 등장한다. 다시 말해, 전체의 번영이 각 구성원의 번영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바로 이런 간극에 시민사회의 역할이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강산 관광단지 및 개성공단의 운영 정지 사태 등이 인도주의와 민간 참여의 여건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지난 10월 중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 월드컵 2차 예선전인 남북 축구경기가 생중계 대신 문자중계가 된 것은 번영과 교류·협력의 여정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번영과 관련된 인식이 다음과 같이 확장되었다. 즉 민족적 대단결-->공리공영.

2. 기독교 통일담론의 도전과 기여

기독교 신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미래 시나리오와 관련이 있다. 먼저 신학의 분야에 있어서, 세계 종말 및 그 이후를 다루는 종말론이 포함된다. 최근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히는 위르겐 몰트만(Juergen Moltmann)은 종말론이 신학의 한 분야가 아니라 중심이라고 설파하여 종말론적 신앙을 유행시

49) Bertram Silverman & Murray Yanowitch, *New Rich, New Poor, New Russia: Winners and Losers on the Russian Road to Capitalism*, expanded ed.(Ar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0), xx.

킨 바 있다. 또한 신학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구현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로 제시된다. 뿐만아니라 신학의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 성격은 바로 평화인데, 이것은 성서적 용어로는 샬롬(shalom)이다. 따라서 이런 신학적 배경을 지닌 기독교 통일담론은 통일 후 한반도에 대한 기독교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

기독교 신학이 한반도와 관련하여 발전시킨 신학으로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희년신학(theology of jubilee)이고, 다른 하나는 정의평화창조질서의보전신학(theology of justice, peace and integrity of creation)이다. 첫째, 희년신학은 남북한교회의 만남을 통해 발전했다. 희년신학은 1995년을 희년으로 설정하고, 1995년을 전후로 통일담론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다가 구체적인 성과가 없자 활기를 잃고 말았다.[50] 더구나 북한의 김일성이 1995년 희년 개념에 대하여 관심을 보이자, 오히려 이런 호응이 남한 내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신학계가 최근 이에 대해 다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당시만큼 활력을 회복할지는 미지수이다.[51] 희년사상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성서 시대의 역사나 교회역사상 실천된 바가 없고, 오히려 유토피아적 대안이나 사회개혁의 출사표로 사용된 적이 많다.[52] 따라서 통일 후 사회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청사진이 되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

50) 이중표, 『민족의 희년: 이중표목사 설교집, 제8권』(서울: 쿰란출판사, 199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여성위원회, 『기쁨의 해를 준비하는 여성: 여성과 1995, 평화통일 희년』(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통일문제위원회 편, 『한민족 한교회: 1995 희년을 향한 기독교평화통일 협의회 보고서』(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1); 평화통일희년준비위원회 편, 『희년을 향한 순례』(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민족의 희년을 향한 행진』(오산: 한신대학, 1993); 희년노래기획편집위원회, 『희년노래』(서울: 한울, 1994);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편, 『희년과 한국교회의 선교』(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1994); 채수일, 『희년신학과 통일희년운동』(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5); '95통일희년교회여성협의회, 『새날을 낳으리라』(서울: '95통일희년교회여성협의회, 1996); 신학연구위원회 편, 『희년신학연구』(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97).

51)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편, 『희년예배서: 주일예배·매일기도·상황예식』(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2003); 『정의·평화·통일 자료집: 새역사 희년문집』(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출판사, 2003); 김병하, 『희년 사상의 영성화: 오경에서 누가복음까지-중간기 문헌을 중심으로』(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5); 로버트 앤덜슨(Robert V. Andelson)·제임스 도오시(James M. Dawsey), 전강수 역, 『희년의 경제학: 땅없는 사람들의 희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황창호, 『희년의 복, 生態회복: 지구적 안녕, 통일의 성서적 비전』(서울: 뉴호라이즌, 2011); 김근주 외, 『희년, 한국사회, 하나님 나라』(서울: 홍성사, 2012); 양희송, 『이매진 주빌리: 오늘을 위한 사회적 상상, 희년』(서울: 메디치, 2016).

52) F. Ross Kinsler & Gloria Kinsler, *The Biblical Jubilee and the Struggle for Life*(Maryknoll: Orbis, 1999).

를 안고 있다.

둘째,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신학은 에큐메니칼운동이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적인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내세운 일종의 종합적인 신학적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신학에는 정의, 평화, 생명(생태 혹은 환경)의 세 가지 주제가 들어 있고, 이 주제들은 개별적으로 또한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정의평화창조질서의보전신학과 관련하여 주요 대회가 모두 한국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이다. 1989년 세계개혁교회연맹 총회가 총회 주제 중 한 가지로 다뤘고, 1990년 세계교회협의회의 정의평화창조질서의보전신학 대회가 뒤를 이어 열렸으며, 최근에는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부산총회가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란 개념을 변형한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인도하소서'라는 주제로 모였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바로 이 문제가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장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고, 이런 상황은 한반도의 통일 이후의 상황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정의, 평화, 생명의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정의와 평화의 주제는 통일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논의가 되었으나, 생명에 대한 주제는 최근에 다뤄지기 시작하고 있다.[53] 이런 관점에서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한반도에서 반핵 및 비핵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운동이 일천하다는 것은 한반도의 특수 정세를 고려하더라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런 정황은 한국의 평화운동의 전반적인 부진과도 무관하지 않다.

Ⅶ. 결론: 전망을 대신하여

우리는 본고에서 기독교 통일담론이 한국 통일담론에 대한 기여를 살펴보았다. 한국 통일담론을 간략하게 개관하기 위하여 정부 통일정책의 내용으로 대신하였다. 정부 통일정책은 통일운동, 통일연구(통일담론),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면서도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남북한 당국이 공히 이전의 통일정책을 존중하지 않아 연속성을 기하기가 어렵다. 남한의 경우, 정권교체에 따라 차기 정권이 이전 정권의 통일정책을 인정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인하는 경우가 있

53)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의 생태 신학적윤리적 토대 구축에 관한 연구: '생명의 숲' 신학 모색과 현 정부의 '그린 데탕트' 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안교성 편, 『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전망』, 187-224.

다. 이것은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정권과 정부의 구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은 단일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정권교체보다는 상황논리에 따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 마디로 기준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둘째, 민간 참여의 자율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민간의 정부 종속화 현상이 가까운 장래에 타개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경우는 남한보다 상황이 더 양호하지 못하다. 이런 양상은 통일운동의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는 통일문제의 선도자 역할을 했고, 이런 가운데 다양한 통일신학을 제시하고 통일운동을 벌린 바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과 관련하여 민족 동일성 회복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통일문제의 세계성을 부각했고, 주체사상 연구를 촉발했다. 둘째, 평화와 관련하여 평화와 화해의 발전을 추구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평화통일담론을 정착시켰고, 새로운 평화운동과 평화학을 도입했다. 셋째, 인도주의 및 민간 참여와 관련하여 민간 참여 담론을 구체화하였는데, 민간 참여가 시민 개념을 넘어서 민주, 민중 개념을 포함해야 함을 강조했고, 문화적 접근 담론 특히 사람 중심의 통일담론을 발전시켰으며, 사회주의 체제 연구를 추진했으며, 구동독교회 연구를 통해 민족 동질성의 일환인 교회 동질성을 탐구했으며, 통일 교육 및 훈련을 확산했으며, 기독교 현실주의를 통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담론개발에 힘썼다. 넷째, 번영과 관련하여 미래적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를 위하여 희년신학과 정의평화창조질서의보전신학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기독교 통일담론이 한국 통일담론에 계속 기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기독교 자체가 평화의 존재가 되어, 기독교 내외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를 구현하고 모델이 되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 통일담론이 기독교 고유의 목적을 이루면서 동시에 한국 통일담론 전반에 기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셋째, 기독교가 기독교 통일담론과 한국 통일담론 모두에 깃든 이기주의와 편협성을 경계하기 위하여, 스스로 객관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한국에서 통일을 둘러싼 상황이 복잡 미묘하여, 통일담론은 다차원인 성격을 나타낸다. 첫째, 통일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통일담론은 미래학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한반도가 현재 상태에서 분단 갈등이 일상적인 현실이라는 점에서, 통일담론은 평화학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 한반도는 일제강점기이란 질곡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일련의 현대사적 비극을 경험했기 때문에, 통일담론은 역사학의 성격을 지닌다.

한국기독교는 이런 격변의 근현대기를 국가와 함께 겪어왔고, 국가발전에 일익을 담당해왔다. 최근 들어 통일문제에 다방면으로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통일은 대의명분인 동시에 여러 당사자들의 이익이 상충하는 사안인 만큼, 한국기독교는 이제 통일을 선도한 역할을 넘어서서 새로운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 한편으로는 통일의 일원으로서 기독교적 지혜에 기초한 통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참여적 관찰자의 입장에서 통일의 진정성이 확보되도록 감시자와 조언자가 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영동,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회의 참여 방향 연구". 안교성 편. 『(제2회 평화통일신학포럼)독일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전망: 신학적 성찰과 과제』. 서울: 나눔사, 2016. 51-56.

김흥수, "남북한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 통일운동의 관계". 『선교와신학』 35(2015), 83-115.

배희숙, "에서/에돔—야곱/이스라엘 관계에 나타난 통일신학의 기초". 배희숙 외. 『(제1회 평화통일신학포럼)평화통일신학: 신학적 근거의 모색』.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남북한평화신학연구소, 2015. 13-48.

서보혁·정주진, 『평화운동: 이론·역사·영역』. 과천: 진인진, 2018.

안 신, "남북한 평화 통일과 한국 종교의 다양한 모델들: 개종, 대화, 협력, 변혁의 모델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25(2010), 207-232.

안교성, 『한국 교회와 최근의 신학적 도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2017.

이찬구, "종교평화학의 모색: 평화학과 종교가 만나는 지점". 『종교교육학 연구』 14(2013), 145-169.

이창호, 『평화통일 신학과 실천: 기독교 통일 연구의 흐름과 전망』. 서울: 나눔사, 2019.

임순희, 『북한 주민의 종교성: 북한문학작품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평화나눔연구소, 2016.

통일부, 『2019 통일문제 이해』. 서울: 통일부, 2019.

하충엽, "한경직 목사의 북한선교사역". 김은섭 편. 『한경직 목사의 사상과 사역』.

서울: 나눔사, 2014. 364-387.

Page, James Smith, "The International Year for the Culture of Peace: Was It Worthwhile?".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Studies* 4/3(2001), 348-351.

Silverman, Bertram & Murray Yanowitch. *New Rich, New Poor, New Russia: Winners and Losers on the Russian Road to Capitalism*, expanded ed. Armonk, New York; London: M. E. Sharpe, 2000.

World Council of Churches, *Mans' Disorder and God's Design: The Amsterdam Assembly Series, Book III. The Church and the Disorder of Societ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48.

Abstract

What Does the Korean Christian Re-unification Discourse Contribute to the Korean Re-unification Discourse, and How?

Kyo Seong AHN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hurch History/ Historical Theology

Throughout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Korean Church continues to participate in, take the initiative in, and be conducive to the Korean re-unification movement. In spite of this, the Korean Christian re-unification discourse and the Korean re-unification discourse tend to draw parallel lines, and thus there seems to be few, if any, mutual understanding and bilateral interaction, let alone the synergic effect between two discourses. This article aims to compare the two discourses, by summarizing the Korean re-unification discourse through the basic ideas of the Korean government's official documents on re-unification. It attempts to focus on answering the following question: what does the Korean Christian re-unification discourse contribute to the Korean re-unification discourse, and how?

The basic ideas of the government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ation (autonomy and national unity), peace, humanism and civil participation (democracy and Minjung), and prosperity(profit and prosperity). On the other hand, the Korean Christian re-unification discourse suggests various theology of re-unification and lead the re-unification movement. First, as for nation, it pursues the recovery of the homogeneity of the people, sheds light on its global dimension, and paves the way for the study of Juche, the ideology of North Korea. Second, regarding peace, it seeks for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of peace and reconciliation, settles dow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discourse, and introduces peace studies and the peace movement. Third, as regards humanism and civil participation, it widens the concept of participation from citizenship to democracy and to Minjung, develops diverse areas such as culture-oriented re-unification study, including the re-unification of people, research on socialist system transition the homogeneity of the church as part of the homogeneity of people based on the case study of the ministry of the former Eastern German church, disseminates re-unification training and education, and plans for a feasible scenario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realism. Last, in relation to

prosperity, it presents a great vision such as theology of jubilee and theology of peace, justice and integrity of creation.

Key words: Re-Unification, Discourse on Re-Unification, Christianity, Nationalism, Peace, Civil Sector/Humanism, Prosperity

논문접수일	2019.10.30	논문심사일	2019.11.15	게재확정일	2019.11.20